



# 4

## 경제·통상 외교 강화

제1절 세계 금융·경제위기 대응 외교	104
제2절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110
제3절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126
제4절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외교	131
제5절 양자·다자 통상외교	138
제6절 통상투자진흥외교	163



## 제1절

# 세계 금융·경제위기 대응 외교

## 1.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외교

### 1) G20 정상회의 참가 및 차기회의 유치

1930년대 이후 최대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정상들이 모여 제1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2009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세계 경기의 하강이 본격화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9년 3월 보고서에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1년 GDP 규모에 육박하는 50조 불에 달하는 금융자산의 손실이 있었다고 보고했고, IMF 기준 세계 교역량은 2008년 대비 11% 감소하는 등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의 충격은 심각했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의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높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런던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공조, 보호주의 저지 공조 노력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1990년 말 우리나라 외환위기 시 부실 채권 처리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부실자산 처리 원칙을 수립하여 국제적으로 공조해나갈 것을 역설하였으며 이는 G20 정상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G20 정상들이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재원확충을 통해 1.1조불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에 합의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 이후 세계금융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세계경기의 급격한 하락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점차 출구전략 준비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9년 G20 국가평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IMF 발표 기준)보다 훨씬 높은 3.6%의 재량적 재정지출을 시행하여 여타 G20 국가 보다 높은 GDP 성장을 실현함으로써 경제위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높은 실업률 및 저조한 민간투자와 소비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었으며 향후 시행될 출구전략이 공동 원칙에 따라 국제공조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또 세계경제의 수요부족 현상과 불균형 성장 문제를 감안할 때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균형적 성장을 하기 위한 협력체제 구축이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핵심적 의제로 부각되었다.

우리 정부는 출구전략의 원칙에 대한 호주와의 공동 제안서를 사전에 발표하여, 이 후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에 대한 G20 국가 간 합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공동기고를 통해서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경제공조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출구전략을 비롯한 위기 후 지속 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과정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경제 정책을 감안한 유연한 협력 체제를 제안하여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IMF 가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편 보호주의 저지와 함께 2010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여 피츠버그 정상회의 주요 결과로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 노력과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G20 국가들의 전례 없는 공조 노력을 통해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았고, 국제사회는 G20의 역할과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G20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G20를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 캐나다, 11월 한국,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G20 정상회의의 연례화는 우리나라가 워싱턴 정상회의 출범 단계부터 그토록 노력해왔던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례적 참여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 2) 국제금융기구 참여 확대

우리 정부는 G20 정상회의 유치와 함께 국제금융감독 체제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가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FSF는 국제금융 안정도모, 금융기관 거래의 지도, 감독협조, 국가 및 국제감독기구, 국제금융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9년 설립된 국제기준제정 기구로서 국제금융협력의 중심기관이었다. G20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기여와 적극적인 가입 교섭의 결과 2009년 3월 11일 런던에서 개최된 FSF 총회에서 기존 12개 회원국에 추가하여 G20 국가 중 회원국이 아니었던 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와 스페인, EC가 새로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 3월 13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 3) 글로벌 경제 현안 논의에 대한 참여

### (1) G8 정상회의 참석

G8 정상회의는 주요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공론의 장(場)이다. 2009년도 G8 정상회의는 7월 8~10일간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되었다. G8 라퀼라 정상회의는 G8을 포함한 총 28개 국가와 12개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경제, 기후변화, 무역, 식량안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들을 도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글로벌 이슈 대응 노력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2008년도 G8 정상회의에 이어 G8 라퀼라 정상회의에도 연속 초청되었는데, 이는 2008년 11월 워싱턴과 2009년 4월 런던, 9월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참여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이슈 대응과정에 주요 참가자로서 입지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G8 라퀼라 정상회의는 무역, 식량안보, 기후변화 3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우선 그간 답보상태에 있던 WTO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을 2010년까지 타결하기 위해 참가국들이 노력키로 함으로써 협상이 새로이 진전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3년간 200억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2°C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라퀼라 정상회의 기후변화 세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하나인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분야의 선도 국가로 선정되었다.

##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활동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의 경제 성장 촉진 및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다자 간 자유무역 원칙에 의한 세계 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래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에 매년 참가하여 세계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OECD 조선 작업반회의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신조선 협정 협상 절차에 관한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해오고 있다.

특히 2009년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이래 최초로 각료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여 우리의 제안으로 각료성명서 및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2010년도 G20 의장국 수행과 더불어 경제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한 해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와 공동 주관으로 부산에서 제3차 OECD 세계 포럼을 개최하여 GDP에 근거한 경제발전의 측정을 뛰어넘어 사회 발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OECD의 규범 분야 지표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 (3)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활동

UNESCAP(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은 회원국 수가 62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괄적인 정부 간 기구이다.

2009년 4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65차 UNESCAP 총회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측 수석대표이자 전년 총회 의장으로 참석하여, 총회 개회식을 주재하였다. 또한 우리 수석대표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아태지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경제위기 고위급 패널에 참석하여 G20 런던정상회의(2009.4) 결과 및 우리나라의 기여에 대해 설명하였다. 2010년 제66차 총회는 ‘MDGs 달성을 위한 녹색성장과 재정시스템’을 주제로 우리나라(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9년 8월 UN 개발 분야 강화 차원에서 신설되는 UNESCAP 동북아 지역사무소가 인천에 설립키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우리를 비롯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 몽골을 관할하게 되는 동 지역사무소를 발판으로 한·ESCAP 협력 증진, 동북아 협력 강화 등 아태지역 외교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이미지를 제고해나갈 것이다.

#### (4) 세계경제포럼(WEF) 참석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는 매년 초 세계 각국의 정·관·재계 지도자들이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그해의 글로벌 이슈와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참가자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민간 포럼이다. 아울러 다보스 포럼은 2,0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간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모임이다.

우리나라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가 2009년 1월 28일~2월 1일 간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세계경제성장 회복’ G20 특별세션을 비롯한 6개 세션에 주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과 전략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포럼 참석 계기에 Brown 영국 총리, Merz 스위스 대통령, Rasmussen 덴마크 총리 등 참석국 정상과 UN 사무총장, OECD 사무총장, FSF 의장 등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국제공조의 필요성 등을 심층 논의하였다.

정부는 다보스포럼 참석을 통해 각국 정상, 민간 기업과 금융계 인사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정책을 홍보하고, G20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제2차 런던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이슈 관련 우리의 주도적 정책을 소개하여 참가국들의 높은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 2. 보호무역대응

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위험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조치 감시·대응 Task Force」가 2009년 1월 초 통상교섭조정관을 의장으로 구성되어 산하에 국제회의대책반, 개별조치대응반 및 WTO제소대책반을 운영해왔다.

국제회의대책반은 G20 워싱턴 정상회의(2008.11.15)에서 우리 대통령 주도로 ‘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 보호무역주의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수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우리는 G20에서 합의한 보호무역 저지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WTO가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WTO는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의 무역조치,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지원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하였다. 11월 19일 회람한 종합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보호무역주의가 WTO 규범 및 G20 Standstill 선언 등으로 제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국제회의대책반은 이 밖에도 OECD와 APEC 등 주요 회의 계기마다 보호무역대응을 주요 의제로 포함시킴으로써 Standstill 합의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감대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조치대응반은 통상적인 수입 규제 조치 외에 품목 분류를 통한 관세 인상, 수입 상품에 대한 인증 제도 강화, 수입 물량 제한 등 총 32개의 조치에 대해 입체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 중 22건에서 조사 중단, 관세율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경감된 관세부담 총액은 5억불에 달하였다.

WTO 제소대책반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사전 법률검토를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일본 측이 하이닉스 DRAMs에 부당하게 부과해온 상계관세를 2009년 4월 22일 완전 철폐되도록 하였다.

## 제2절

#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 1. 우리의 FTA 정책 기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과 선진통상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수의 급증 등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주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주요국가와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FTA 추진 노력의 결과, 2008년까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총 4건, 15개국과 FTA를 발효시킨 바 있다.

2009년에 들어와서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되고,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유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미국,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완성에 주력하는 한편, 인도 등 차세대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병행 추진하면서 GCC, 호주 등 자원부국과의 FTA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매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EU FTA를 타결(2009.10 가서명)시켜 발효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한·인도 CEPA도 2010년 1월부터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한·ASEAN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도 각각 2009년 5월과 9월에 발효시켜 한·아세안 FTA를 완성하였다.

또한 결프협력이사회(GCC)와의 FTA 협상을 진전시키고,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을 새롭게 개시하여 착실히 진전시키는 한편,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에도 합의하였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등 인근 국가와의 FTA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이스라엘, 메르코수르 등과도 FTA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하였다.

## 2.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

### 1) 한·미 FTA 비준 노력

한·미 FTA는 2006년 2월 3일 협상을 개시에 합의하고,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3월 말 고위급 협상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20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 지적재 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 한·미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대미 수출은 연평균 25.5억불 증가하고, 10년간 실질 GDP는 6.0%(약 80조원), 대미 흑자는 46억불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비준·발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7년 9월 7일 17대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2008년 5월 29일 17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2008년 10월 8일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고, 동 동의안은 2009년 4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007년 9월 「한·미 FTA의 미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의회 심의 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지속과 무역정책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 절차는 개시되지 못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 내 최대 협약인 의료보험 개혁 문제, 10% 내외의 높은 실업률 지속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인이 겹쳐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 절차 개시는 계속 지연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4.2, 6.16, 11.19) 계기마다 한·미 FTA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한·미 FTA 진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양 정상의 의지를 토대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있다.

## 2) 한·EU FTA 가서명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EU와의 FTA 협상은 2007년 5월 6일 한·EU 통상장관이 함께 한·EU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2007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공식협상과 다수의 고위급 회담을 거쳐, 2009년 7월 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한·EU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하였음을 발표하였다. 2009년 7월과 9월, 두 차례의 법률검토회의를 거친 후, 2009년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시튼(Catherine Asht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

한·EU FTA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상품에 대한 EU의 관세를 교역액 기준으로 5년 내에 100% 철폐하고, EU 상품에 대한 우리의 관세는 5년 내 97%를 철폐하게 된다. 또한 한·EU FTA는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 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과 함께 지재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경쟁 등 주요 무역규범

을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다.

특히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인 EU와의 FTA는 상품 분야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상당한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U(5.2%)는 미국(3.5%)보다 평균관세율이 높다(2007년 기준).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EU FTA는 우리 업계에 가시적 혜택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우리의 교역확대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한·일 FTA 여전 조성 노력 지속

한·일 양국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우리 관심사항에 대한 양국 간 의견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2008년 4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중 2차례의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양국 간 의견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일본은 실무협의 수석대표를 격상해야 우리가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 보다 개선된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 2009년 2월 11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실무협의 수석대표를 과장급에서 심의관급으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9년에 2차례의 심의관급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과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의 FTA는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일 FTA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FTA로 인해 단기적으로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부품소재 산업 등 우리의 제조업계도 상당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FTA를 통해 양국 간 단기 및 장기 이익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FTA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실무협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3. 차세대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 1) 한·인도 CEPA 체결

한·인도 양국 정부는 갈수록 긴밀해지는 양국 경제통상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6년 3월부터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12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거쳐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부 장관이 한·인도 CEPA에 정식 서명하였다. 정부는 2009년 8월 26일 국회에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우리 국민과 경제계의 관심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2009년 11월 6일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양국 정부는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아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를 발효시키게 되었다.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품 분야에 있어서 인도는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의 대인도 수출의 85%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대인도 수입의 93%, 수입액을 기준으로 대인도 수입의 90%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하였다. 양국의 상품시장 개방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양국의 경제발전 수준 및 평균 관세율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또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상호 개방하기로 하였다.

원산지 기준은 인도가 기존에 체결한 FTA보다 한층 완화되어,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한·인도 CEPA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WTO DDA 협상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특히 외국 전문 인력의

도입이 필요한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등의 경우, 양질의 저렴한 인력이 보다 간소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투자분야에서는 1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투자를 자유화시키는 한편,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 13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1억 5,000만 명의 인구와 세계 제4위의 구매력을 보유한 인도는 최근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BRICs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급증하고 있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 효과만 계산해도 앞으로 10년간 대인도 수출은 17억 불, 무역흑자는 14억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인도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 속도,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 및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한·인도 CEPA의 실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수출이 제고될 수 있고, 외국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문가 교환이 촉진되어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 마무리 노력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가 2006년 11월 종료되었고, 그 직후인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 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7년 3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출범하였고, 2008년 6월까지 총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동연구 보고서의 일부 문안에 대한 양측 간 이견으로 동 공동연구가 2009년도에 종료되지 못하였으나, 양국은 빠른 시일 내에 공동연구를 종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 업계가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큰 반면, 양국이 유사한 농산물을 생산·소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농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 농업계의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국 간 상호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3) 한·MERCOSUR FTA 여전 조성 노력

우리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중남미 최대의 경제 통합체이자 GDP 2조 불, 인구 2.4억 명의 거대 신흥시장인 MERCOSUR와의 FTA 체결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에너지·광물·식량 자원의 요충지이자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MERCOSUR와의 FTA 체결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004년 11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한·MERCOSUR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sup>1)</sup> 공동연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4 차례에 걸쳐 정부간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2006년 12월에 사실상 완료하였다.

한·MERCOSUR 정책협의회 계기에 한·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보고서는 2007년 10월 공식 채택되었는데, 동 보고서는 한·MERCOSUR 경제의 상호 보완성에 입각하여 FTA가 체결되면 GDP 증가율이 한국은 0.17~2.00%, MERCOSUR는 0.02~2.74%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전자제품, 핸드폰, LCD, 의약품 및 섬유 등 공산품에서, MERCOSUR는 쇠고기, 오렌지 주스, 대두 등 농산물 분야에서 각각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MERCOSUR 양측은 FTA 여전 조성 노력을 지속해나가자는 차원에서 2009년 7월 23일 「한·MERCOSUR TA 추진협의를 위한 양해각서(MOU)」<sup>2)</sup>에 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MERCOSUR와의 FTA 추진 타당성 및 구체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MERCOSUR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감안하여 국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MERCOSUR FTA 협상개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나가고자 한다.

1)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은 FTA 등 무역관련 협정의 포괄적인 명칭으로 MERCOSUR 측이 현 단계에서 FTA 명칭 사용을 주저하여 TA를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MOU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남미공동시장 간의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nsultative Group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ERCOSUR)」로, TA 공동연구 후속조치 차원의 추가 연구대상 범굴, 무역협상 (Trade negotiations) 개시 가능성 협의 및 정책 권고 마련을 위한 공동협의체(Joint Consultative Group)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4) 한·러시아 FTA 여건 조성 노력

한·러시아 양국은 2005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 간에 서명한 「한·러 경제·통상 행동계획(Action Plan)」에 따라 ‘한·러 BEPA(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공동연구그룹’을 결성하고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8년 7월 8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상품양허,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TBT), 무역구제 등 상품교역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러시아와의 FTA 체결은 우리의 수출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지원 부국 및 전략적 지역거점 국가와의 FTA

#### 1) 한·GCC FTA 협상 진행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간에 체결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중동 지역 최대의 경제권이다. 2008년 7월에 한·GCC FTA 제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2009년에 2차례의 협상(2009. 3, 7)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 양측은 상품 양허안, 서비스 양허안 및 정부조달 양허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정부조달, 경제협력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와 GCC 간의 무역은 2009년도에 우리나라의 GCC에 대한 수출이 117억 불, 수입이 498.7억불에 달하였다. 수입액 중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 및 LPG 수입이 총 수입의 약 97.6%를 차지하였고, 금액으로는 486.9억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GCC로부터 도입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GCC FTA는 경제 교류 확대 및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12월에 실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한·GCC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수출은 2.6억불(4.9%), 수입은 7.0억불(2.4%)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2) 한·호주 FTA 협상 출범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자원 수출국이자 농업개혁정책과 선진기술을 갖춘 농업선진국으로, 자국의 주력품목인 광물자원과 농산물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공산품 수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근 몇 년에 걸쳐 세계 주요 교역국들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호주 FTA 협상 논의는 2007년에 실시한 FTA 민간공동연구, 2008년 4월에 개최된 라운드테이블 회의, 그리고 2008년 10월과 12월에 2차례 개최한 예비협의를 거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이후 2009년 3월에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FTA 협상 출범에 합의하였다. 2009년 5월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한 데 이어 8월과 11월에 각각 제2차 협상과 제3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양국은 협정문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상품 양허안 협상과 서비스 투자 유보안 협상도 점차 본격화되게 되었다.

한·호주 FTA는 우리의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며, 농업분야 협력을 비롯한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한·뉴질랜드 FTA 협상 출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호주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자 원목, 석탄, 알루미늄, 가죽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원이기도 한 뉴질랜드와의 FTA는 우리 상품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인력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한·뉴질랜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뉴질랜드 양국은 2006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민간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2008년에 정부 간 라운드테이블 회의 및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가졌다.

2009년 3월 3일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양국은 2009년 6월, 9월, 12월에 걸쳐 세 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다.

## 4) 한·페루 FTA 협상 출범

페루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멕시코 및 칠레와 함께 FTA 선도국에 속한다. 적극적으

로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일찍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증진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도 모색해오고 있다.

한·페루 FTA는 2005년 11월에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8년 11월 21일 개최된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은 한·페루 FTA 협상 출범에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2009년 1월에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하였고, 2009년 3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4회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1차례의 회기간회의도 가졌다.

그 결과 양국은 TBT(무역관련 기술장벽), 무역원활화, 서비스, 통신, 금융, 재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등 협정문의 14개 챕터 및 품목별원산지규정(Product Specific Rules)을 타결하였고, 무역구제, 원산지, 투자, SPS(위생 및 검역) 챕터도 실질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앞으로 양국은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인 상품시장 개방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를 집중할 예정이며,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 을 경주해나갈 예정이다.

페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 이상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한 중남미의 유망 수출 대상국이다. 한·페루 FTA는 개방적이고 성장 잠재성이 큰 페루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석유, 은, 아연, 주석 등 에너지·광물 자원 부국인 페루에서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확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한·캐나다 FTA 협상 진행

캐나다와는 2005년 7월에 제1차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양국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금융, 통신, 인력이동 포함), 투자, 정부조달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2009년도에는 공식협상이 개최되지 않았다.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등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토대로 교역관계를 한층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캐나다와의 FTA 협상에서 우리 민감 품목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6) 한·멕시코 FTA 협상 진행

멕시코와는 2007년 8월 기준의 한·멕시코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협상을 정식 FTA 협상으로 승격하여 재개한 이래 2차례 협상(2007.12, 2008.6)을 개최하였으나, 멕시코 국내 업계의 반대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한·멕시코 FTA는 우리 기업의 북중미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GDP는 단기적으로 0.03%, 장기적으로 0.5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은 6.8억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멕시코 FTA는 다른 대부분의 FTA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양국 간 협력 전반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7) 한·터키 FTA 공동연구 종료

한·터키 양국은 2008년 6월에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2009년 5월에 종료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09년 중 FTA 협상 개시를 모색하였으나, 우리측이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오고 있는 데 비해 터키 측은 상품 분야 위주의 FTA를 체결해오고 있어 우선 FTA 포괄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FTA 포괄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터키가 EU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으므로 한·EU FTA를 토대로 양국 간 FTA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청회, FTA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2010년 상반기 중에 한·터키 FTA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두보의 위치에 있다. 이러한 터키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터키 인접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거점과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

## 8) 한·콜롬비아 FTA 협상 출범

콜롬비아는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연 6%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제3위의 소비

인구(약 4,600만 명)와 제5위의 경제규모(약 2,400억불대의 GDP)를 갖추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중견국가이자 자원부국이기도 하다. 또한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아 중남미의 주요 협력 대상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콜롬비아의 중남미지역 내 전략적 입지를 고려하여 FTA 체결을 통한 콜롬비아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콜롬비아 FTA는 2008년 11월 페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FTA 추진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양국 민간 기관이 FTA 체결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한·콜롬비아 FTA 추진을 권고하였다. 이후 양국 정부는 공청회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거쳐 2009년 12월 7일에 제1차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 범위 및 분과 구성, 시장개방 협상 방식, 협상 일정 등 협상 운영세칙에 합의하였으며, 2010년 3월 중 제2차 협상을 개최하여 협상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콜롬비아와의 FTA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의 대콜롬비아 시장 진출과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관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9) 한·이스라엘 FTA 공동연구 진행

한·이스라엘 양국은 2009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한·이스라엘 공동위원회 계기에 FTA 공동연구를 개시키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9년 8월과 9월에 2차례 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2차례 회의를 더 거쳐 2010년 7월경 공동연구를 종료할 계획이다.

생명공학과 과학영농 등 선진 하이테크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FTA는 이 분야에서의 기술이전 도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휴대폰, 초고압케이블 등 우리나라의 대이스라엘 주력수출품의 수출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다자 간 FTA 논의에의 적극 참여

### 1)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9년 10월 1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기

존의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2003~2009년)를 종료하고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10월 24~25일 태국 후아힌에서 개최된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에서 2010년 상반기 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정식 출범시키고, 이를 위한 준비회의를 2010년 초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전 세계 주요 교역국 가운데 인접국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지역은 한·중·일 3국이 유일하며,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잠재력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도 한·중·일 FTA 논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중·일 FTA 논의는 한·일 FTA와 한·중 FTA 논의를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진전에도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FTAAP 논의 참여

1989년 APEC 창설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경제통합 방안의 하나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FTAAP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4년 제2차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회의에서 보고르 목표(Bogor Goal)<sup>3)</sup> 달성을 위한 하나로 FTAAP 창설이 제안되었다. 이후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장기적 과제로 FTAAP를 포함하여 지역경제통합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키로 합의하였다.

2007년 9월 시드니 정상회의에서 FTAAP의 실현방안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통합 보고서(REI Report)」를 채택하였다. 2008년에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및 폐루와 공동으로 「FTAAP 관련 기준 연구 분석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년 지역경제통합 분야 주요성과의 하나로 평가받은 바 있다. 2009년에도 우리나라 는 「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연구」를 주도함으로써 향후 FTAAP 창설방안 (pathways)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FTAAP 추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유의하고, 민간 기

<sup>3)</sup> 보고르 목표(Bogor Goal)는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APEC 정상회의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APEC 회원국간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달성을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업인들의 의견 및 회원국 간 정치·경제·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장기적 목표로 APEC 차원의 FTAAP 추진 필요성을 검토해나가고자 한다.

## 6. 기발효 FTA의 효과 극대화 노력

### 1) 한·칠레 FTA 이행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FTA이다. 2004년 4월 1일에 발효하였는데, 발효 전 1년 교역량보다 발효 4년 차 교역량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만, 발효 5년 차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교역량이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다. 칠레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발효 전 1년의 5억불에서 발효 후 4년 차에 25억불로 5배가 증가하였고,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에 13억불에서 33억불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 또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에 대한 우리의 투자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한·칠레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5주년 기념행사도 개최되었다.

한·칠레 FTA의 차질 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2009년 말까지 총 6차례의 자유무역위원회(FTC: Free Trade Commission)와 총 18차례의 FTC 산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에 개최된 자유무역위원회에서는 상품위원회와 SPS 위원회를 통해 일차 검토된 분야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간 FTA 발효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칠레 FTA의 개선발전(upgrade)을 위해 상호 협의하기로 하였다.

### 2) 한·싱가포르 FTA 이행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에 발효하였다.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발효 전 134억불에서 발효 3년차에 235억불로 75%가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에 대한 우리의 수출도 같은 기간에 79억불에서 153억불로 94%가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은 48%가 증가하는 데 그쳐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는 23억불에서 70억불로 204%가 증가하였다.

우리와 FTA를 체결하기 전에도 사실상 무관세국가였던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셈이 되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보다 월등히 상회하여 무역흑자폭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출 확대는 우리 제품의 국제인지도 제고와 비관세장벽 개선 등 FTA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양국 간 교역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싱가포르 양국은 2009년 1월 15일~16일간 제1차 이행검토회의를 개최하여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한·싱가포르 FTA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를 최초로 포함시킨 FTA이다.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EFTA, 한·ASEAN 및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는 선례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 3) 한·EFTA FTA 이행

서유럽 강소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는 2006년 9월 1일 발효하였다.

FTA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액은 발효 전 1년(2005.9~2006.8)의 36억불에서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에 해당하는 발효 3년 차에는 62억불로 70% 이상 증가하였다. EFTA에 대한 우리의 수출 규모는 발효 후 3년 차에 50%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무역 역조현상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우리나라가 기공무역 산업에 필요한 공업용 기계류와 선박용 부품 등 공업용 원자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을 상당부분 EFTA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이다.

EFTA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는 승용차, 선박, 무선전화기, 금 등 일부 관세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수입 면에서는 노르웨이산 선박용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특수선박을 제조한 후 노르웨이로 무관세 수출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수출용 제품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후 무관세로 재수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도 했다.

2009년 3월에는 제2차 관세 및 원산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2009년 4월에는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졌다.

#### 4) 한·ASEAN FTA 이행

한·ASEAN FTA 협상에서는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ASEAN 10개국과의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대부분의 FTA 협상에 사용되는 단일협상방식(Single Undertaking) 대신에 순차적인 협상방식을 적용하였다.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에 발효되었고,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각각 2009년 5월 1일과 2009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3개의 협정이 모두 발효됨으로써 2004년 11월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ASEAN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양측 정상이 합의한 한·ASEAN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이 완성된 것이다. 이와 함께 상품무역 협정과 서비스무역 협정 서명에 불참하였던 태국이 2009년 2월 27일 2개의 협정에 대한 가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2010.1.1 발효) ASEAN 10개 회원국 모두에 대해 우리 기업은 한·ASEAN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타결되고 원활한 이행이 시작되면서 한국과 ASEAN 회원국 간 무역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협정 발효 2년 차(2008.6.1~2009.5.31)에 우리나라의 대ASEAN 수출은 협정 발효 전 1년간(2006.6.1~2007.5.31)과 비교해볼 때 21.5%, 수입은 15.8%, 총교역량은 18.8%로 증가하였고, ASEAN은 2007년 한국의 제5대 교역 경제권에서 2008년 이후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3대 교역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전자집적회로, 선박,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천연가스, 경질석유, 동광, 천연고무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상품무역 협정상 전체 품목의 90%에 해당하는 당사국 일반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한국에 비해 자유화가 느리게 진행되어온 ASEAN 국가들의 자유화가 본격화되면 FTA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한·ASEAN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제1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2009년 10월 개최하고, 특히 관세율 정보 확산, 원산지 서식 간편화,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수출품이 한·ASEAN FT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구체 방안을 ASEAN 측과 협의하였다.

## 제3절

#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 1. 에너지협력 외교 적극 추진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의 82%를 중동지역에 의존하는 등 취약한 에너지 안보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은 항상 경제성장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여왔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에너지협력 외교가 국가의 생존과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2009년도에도 정상급 에너지협력 외교의 활발한 전개,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확대, 자원부국과의 우호협력 및 국제 에너지 협력 강화 등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외교를 추진하였다. 관계 부처 및 기업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에너지협력 외교 전개로 2009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9%(2008년 5.7%), 6대 전략광종<sup>1)</sup> 자주개발률은 25.1%(2008년 23.1%)로 제고되었다.

### 1) 정상 등 고위급 외교를 통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2월 이라크 대통령 방한 계기 정상회담에서 한·이라크 에너지·경제 상호지원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1) 유연탄·동·철광석·우라늄·아연·니켈

는 우리 기업의 이라크 내 해외자원개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이라크 주바이르(66억 배럴, 지분 20%)·바드라(7.7억 배럴, 지분 30%) 유전 입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다.

한편 5월 중앙아 순방 시 카자흐스탄에서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 수주 및 잠빌광구(10억 배럴)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방문 계기 수르길 가스전(8억 배럴)사업 추진 등 양국 간 실질적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3월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순방 및 10월 베트남·캄보디아 순방 시에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 UAE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6월 UAE·요르단 순방 시 한·UAE간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UAE 원전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아부다비를 전격 방문하여 수주를 지원한 바 있다.

## 2) 자원부국과의 포괄적 우호협력관계 강화

주요 자원부국과의 전반적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2회 아랍문화축전 개최(5월) 등 한·아랍 소사이어티를 활성화하고, 제2회 한·아랍우호친선 특급 카라반(10월, 아랍 8개국), 중남미 경제협력 카라반(6월,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을 통해 경제·문화 등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심포지움(3월)을 개최, 러시아·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의 에너지·자원 관련 유력인사를 방한 초청하고,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9월),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11월) 및 한·아프리카 포럼(11월), 한·중앙아 포럼(12월) 등을 통해 주요 자원부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가봉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카타르·리비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법적 인프리를 구축하였다.

## 3) 국제 에너지협력 외교의 활발한 전개

2009년도에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금의 석유시장 유입으로 인해, 유가가 2008년 하반기 급락세를 그치고 반등하였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 제고

를 위한 국제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9년 1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설립규정에 서명하고, IRENA 사무국 소재지 선정위원회 의장국 수임 및 IRENA 제2차 준비위원회 부의장국 활동 등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진국과의 양자 협력 또한 확대하여, 지난 9월 우리 에너지관리공단과 덴마크 에너지청 간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MOU를 체결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에너지관리공단과 스페인 에너지 다변화·절약 연구소(IDAE) 간 에너지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자 차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에너지안전수송 국제회의(4월), ASEM 에너지안보장관회의(6월), UN총회 에너지 Thematic Dialogue(6월) 등에 참여하여,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9월) 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및 석유 시장 투명화 관련 논의 등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 2. 해외 자원개발사업 지원 활동 구체화

### 1) 해외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외교적 지원 강화

우리 정부는 2009년도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장기간 시행될 뿐 아니라 해당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 켈광 프로젝트 계약변경 애로, 볼리비아 코로코로 탐사개발 관련 법령 승인 지연, 예멘·페루 현지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안전상 위협, 수르길 가스전 매장량 평가 추진문제 등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 재외공관은 기업과의 직접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

발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였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신규 협력 사업 발굴 및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미(콜롬비아·브라질·페루), 아프리카·태국 에너지협력외교대표단(가나·DR콩고·남아프리카공화국·태국) 등에 10여 차례 자원 조사단등을 파견하였다. 특히 DR콩고 대사관에서 발굴한 '바나나항 자원-인프라 연계사업'은 대표적인 자원-인프라 연계 프로젝트로서 관계부처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 2) 에너지 자원 관련 정보 수집 및 전파

우리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78개 에너지 거점공관에서 해외 입찰정보 등 총 2,300여 건의 에너지·자원 정보를 수집·보고하였다. 이 중 「독일의 그린에너지 정책 및 산업」·「OPEC 개황」 등 주요 보고내용은 책자로 발간·배포하여 활용성을 제고한 바 있다.

또 해외 에너지 정보 홈페이지(energy.mofat.go.kr)에 동 정보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매주 「국제 에너지·자원 동향」을 발간하여 우리 기업에 수시로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11월부터는 '에너지 타임즈(인터넷)'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약 10만 명의 에너지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에 전파하는 등 보다 신속한 전달로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

# 3. 에너지협력 외교 인프라 확충 및 역량 제고

## 1) 에너지협력 외교 구심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외교통상부 내 '에너지외교전략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련 실·국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에너지협력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주관 '에너지협력 외교 지원협의회' (2009년 6회 개최)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에너지·자원 관련 기업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G20 정상회의, G8 에너지장관회의, ASEM 에너지안보장관회의,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등 국제 에너지협력 추진에 있어,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공동위원회·정책협의회(외교통상부)·자원협력위원회(지식경제부)·원자력 공동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등 개최 시 관계부처·기업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 2) 에너지협력 외교 인프라 강화

주요 자원부국에 소재한 에너지 거점공관을 78개로 확대하여 에너지 협력 외교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에너지 거점공관에 인력을 보강하였다. 또한 20여 개 공관에 현지인 에너지 보좌관을 채용하여 에너지협력 외교 업무를 지원하였다.

## 제4절

#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외교

### 1.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외교

#### 1) 「저탄소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국제적 논의 주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외교통상부는 국제사회에서 ‘저탄소녹색성장’ 패러다임 확산을 주도하였다.

5월 29일 서울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된 제1차 동아시아 기후포럼(East Asia Climate Forum)에 참석한 아시아 각국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경험을 교환하였으며, 동아시아 역내 협력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다.

6월 24~25일간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당시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안한 ‘녹색성장 선언문(Declaration on Green Growth)’이 채택되어 OECD 차원에서 21세기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확인하였다. 그에 앞서 6월 1~2일간 제주에서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작성한 ‘저탄소녹색성장’을 정책문서로 승인하는 등 외교통상부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녹색성장 관련 회의문서 채택을 주도하여 국제사회에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리더십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2010년 상반기 중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선도국가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 2)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홍보

우리나라는 7월 8~10일간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된 G8 기후변화 확대정상회의, 코펜하겐 총회 등 각종 다자회의 및 양자회담에서 저탄소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전 세계에 위치한 우리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각 공관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였다. 해외언론을 대상으로도 녹색성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덴마크의 *Dagbladet Borsen*지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에 대한 특집기사가 게재되는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널리 알렸다.

## 2. 유엔 기후변화협상 대응

### 1) Post-2012 기후변화협상 현황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the 13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채택된 발리 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08~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협상(이하 Post-2012 기후변화협상)을 2009년 코펜하겐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타결키로 목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중 강도 높은 협상이 진행되어 총 5차례의 협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12월 7~18일간 열릴 코펜하겐 총회를 앞두고 바르셀로나에서 11월 2~6일간 개최된 마지막 협상회의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주요 쟁점에 대한 대립이 지속되자, 코펜하겐 총회에서 협상을 완전히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

러자 코펜하겐 총회의 의장국인 덴마크는 통상 각료급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3개국 정상들을 초청하여 추후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을 도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 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극심한 대립으로 Post-2012 기후변화협상 타결은 물론,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합의문 채택에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28개 주요국 정상들이 총회 마지막 날인 18일 새벽까지 회합하여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를 도출하였으나, 일부 개도국이 투명성 및 위임사항(mandate) 문제를 거론하여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주요국이 합의한 코펜하겐 합의를 ‘주목한다(take note)’는 문안을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코펜하겐 합의는 문안 작성 작업에서 배제된 개도국들의 반발로 총회 차원에서 채택되지는 못하였으며 앞으로 서명할 국가들 사이에서만 유효하나,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여 최대공약수를 도출한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적고,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산업 구조상 온실가스 배출이 안정화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과 동일한 형태와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되, 우리의 국력과 경제여건에 상응하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자발적 감축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11월 17일에 최종확정한 2020년까지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이 개발 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배출전망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이다. 이는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선도적이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코펜하겐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Annex I) 비당사국으로서 자발적인 감축 행동 근거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난항을 겪은 협상과정 중 선진국의 재원 및 기술 지원을 받는 개도국의 감축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등록부 설치를 제안하여 이를 코펜하겐 합의에 반영시키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로써 기후변화대응 핵심국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코펜하겐 합의 도출 과정에서 우리 대표단은 한·미, 한·중 양자협의 연속개최 등을 통해 주요국간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펜하겐 합의 문안 작성 작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협상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 이명박 대통령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연설

### 3. 환경협력 강화

#### 1)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동북아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 빠른 경제성장, 국가들 간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도 황사, 산성비, 해양오염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최고위급 논의의 장인 제1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가 2009년 6월 북경에서 개최되어 지난 10년간 3국 환경협력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10대 우선협력분야로 황사, 동북아 환경 거버넌스, 환경산업, 생물다양성,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 3R(Reduce, Reuse, Recycle), 국경 간 E-Waste 이동, 화학물질 관리, 환경교육 및 인식제고, 기후변화 대응을 선정하였다.

3국 환경장관들간 합의사항은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 회의에 반영되어 ‘한중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이 별도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향후 환경보호, 3R(Reduce, Reuse, Recycle), 과학기술 공동연구, 수자원 관리, 산림 관리 및 야생동물 보호, 청정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농업, 기후변화 협상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9년 9월 제12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쓰레기 대책,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한국 유치 추진 등을 협의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분야에서 내년도 협력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2009년 10월 제14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상하이에서 개최하고 한·중 녹색경제 연수 프로그램 개설 사업과 해파리 균원지 파악 및 이동경로 공동연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아울러 2009년 제5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한·러 환경장관회담을 러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한

·리 환경포럼은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4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North 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 제14차 고위급회의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참가국들은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효율파트너십(Eco-Efficiency Partnership) 사업을 채택하고, 황사 저감을 포함한 3개 사업을 승인하였다.

2009년 11월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보전사업 제6차 운영위원회가 중국 서안에서 한국, 중국, 북한(옴저버) 및 UNDP/GEF 등 환경기구 참석하에 개최되어, 황해보전 가이드라인인 YSLME 전략행동계획(SAP)을 승인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검토하였다.

또 2009년 12월 한·중·일·러 동북아 역내 4개국이 참여하는 제14차 북서태평양보전 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정부간회의가 일본 도야마에서 개최되어 NOWPAP 사무국(RCU) 성과 평가 결과, 역내 해양/연안 생물다양성 관련 신규과제 추진 방안, NOWPAP 해양쓰레기 저감 사업(MALI) 이행현황, 신탁기금 증액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은 상기와 같은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로 산재된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총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국제 환경협력 강화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 분야, 생태계 분야, 해양 분야, 유해폐기물 및 화학 물질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대응을 위해 160여 개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들이 UN, OECD 등의 지원 아래 발효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태계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르(Ramsar)협약,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화학 및 폐기물 분야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유해화학물질 사전 승인 통보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의 주

요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화학 및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관리 등 전 지구적 환경 이슈 논의 및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2009년에는 생물다양성 협약 등 범지구적 환경협력 논의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2012.10) 제주 유치, UN 사막화방지협약 2011년 제10차 당사국총회 경남 창원 유치 등을 통해 세계 환경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8년 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으로서는 처음으로 2008년 5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 참석,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 주최 동아시아 지역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는 등 LMO 관련 정보의 지역 내 교류 및 개도국의 LMO 관리 능력 배양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 제5절

# 양자·다자 통상외교

## 1.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관계

### 1) 한·중 통상외교

1992년 한·중 수교 아래 양국 관계는 2004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그간 한·중 관계는 정치·외교·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투자 및 인적 교류를 망라한 경제분야 전반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한·중 간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2년 당시 64억불에서 2009년 1,409억불로 약 22배 늘었다. 또한, 중국은 2003년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 2004년부터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2007년에는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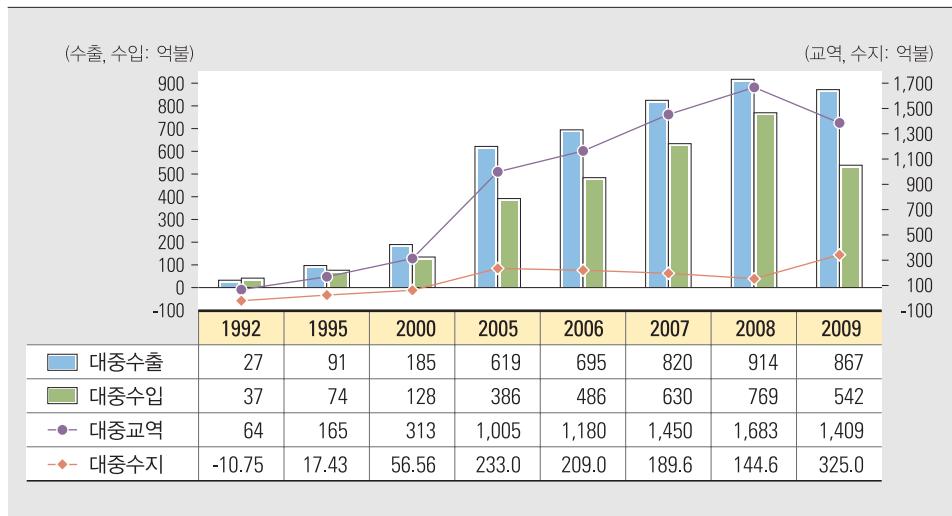
■■■■ 한·중 교역규모 추이

(단위: 억불, %)

	1992년	2009년	증가량(배)
수 출	27	867	▲ 32.1
수 입	37	542.5	▲ 20.8
수 지	-10.7	324.6	-
총 액	64	1409.5	▲ 22.0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05년 233억불을 기록한 이래 다소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09년 325억불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양국은 무역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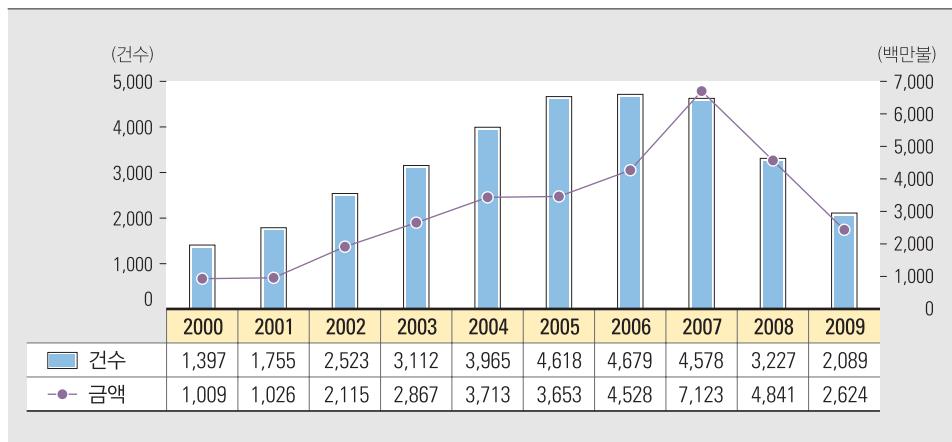
###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교역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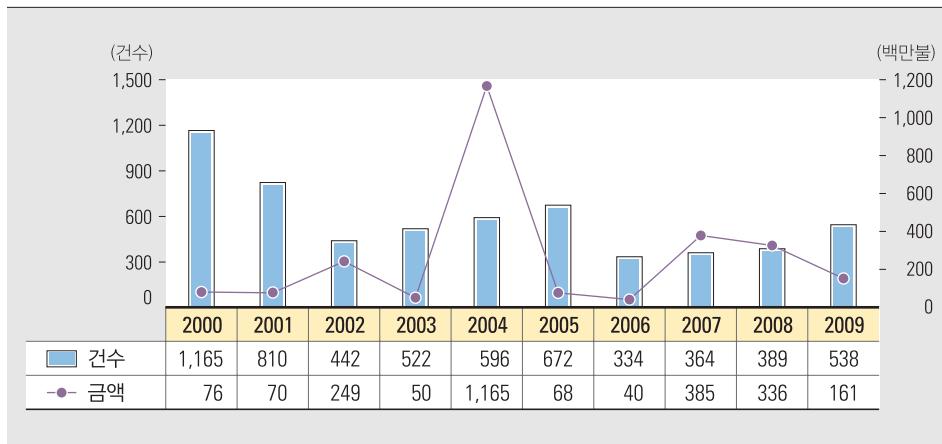
한편, 2008년 5월 27일 중국을 공식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면서, 2,000억불 무역액 달성을 목표를 2010년으로 앞당길 것과,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 한·중 FTA 추진, 환경보호, 에너지, 통신, 금융, 물류 등 중점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국 투자 동향



\*출처: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 ■■■ 최근 10년간 중국의 대한 투자 동향



\*출처: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보고서』는 3차례의 공동작업반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되어 2009년 10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되었다. 동 보고서는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지침서로서, 23개 산업 및 기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내용과 방향을 기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2018년 까지)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투자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이후 우리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대중국 투자 누계 규모는 2009년 39,982건, 408억불에 이른다. 인적 교류에서도 2006년에는 484만 명, 2007년에 585만 명, 2008년 513만 명에 이르렀으며, 2009년 45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양국 간 항공 운항편수는 주간 837편을 상회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국 경제·통상 관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양국 간 통상 현안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양국은 정상회담, 통상장관회담, 경제장관회의 등 장관급 협의채널과 경제 공동위, 무역실무회담, 검사검역협의체 등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한편,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현안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중국 측과 의견을 조율하여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 및 고위인사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확대·심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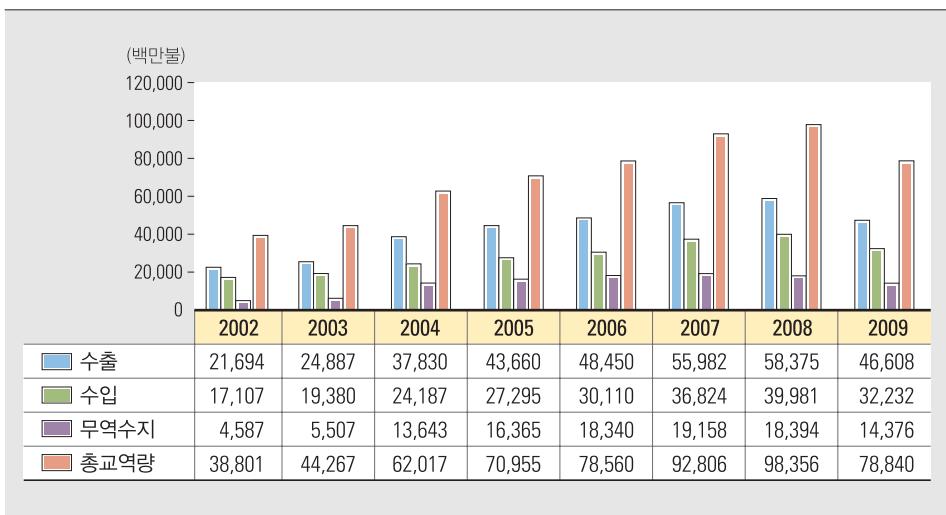
## 2) 한·EU 통상외교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구 5억 126만 명(2009년 기준)의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한·EU 통상관계도 양적 증가와 아울러 질적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의 교역파트너이자 제1위의 대한국 투자주체이며, 우리는 EU의 제8대 교역대상국으로, 양자간 통상·투자 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10.15 가서명된 한·EU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교역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2009년 한·EU 교역규모는 788억불에 달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총 교역의 11.5%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466억불로 전체 수출의 12.8%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구조물 등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대EU 수입액은 322억불로 전체 수입의 약 10.0%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용 제조장비,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등이 중심이었다.

### 한·EU 교역 현황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EU 간 투자 측면에서도 EU는 누계 투자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 주체로서, 2009년 기준으로 총 누계 투자액은 약 565억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EU 누계 투자규모는 약 250억불에 이르고 있다.

### 한·EU 투자동향

(단위: 백만불(건), 총신고수리기준)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62~'09)
EU의 대한국 투자	1,680	3,073	3,008	4,780	4,970	4,331	6,333	5,297	56,468
한국의 대EU 투자	1,250	297	735	671	2,723	2,847	3,041	4,944	24,751

\*출처: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양측 간 경제 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한·EU 양측은 2006년 2차례의 FTA 예비협의를 거쳐, 2007년 5월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09년 10월 가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양국 간의 통상관계는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U는 '한·EU FTA' 협상 출범(2007년 4월) 계기에 양자 간 경제통상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한·EU 기본협력협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2008년 6월에 동 협정의 개정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09년 10월에 가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양국 정부는 '한·EU FTA' 및 '개정 한·EU 기본협력협정'을 기반으로 하여 한·EU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9년 한·EU 정상회담(5.23, 서울)에서 한·EU 기본협력협정의 개정과 한·EU FTA 체결을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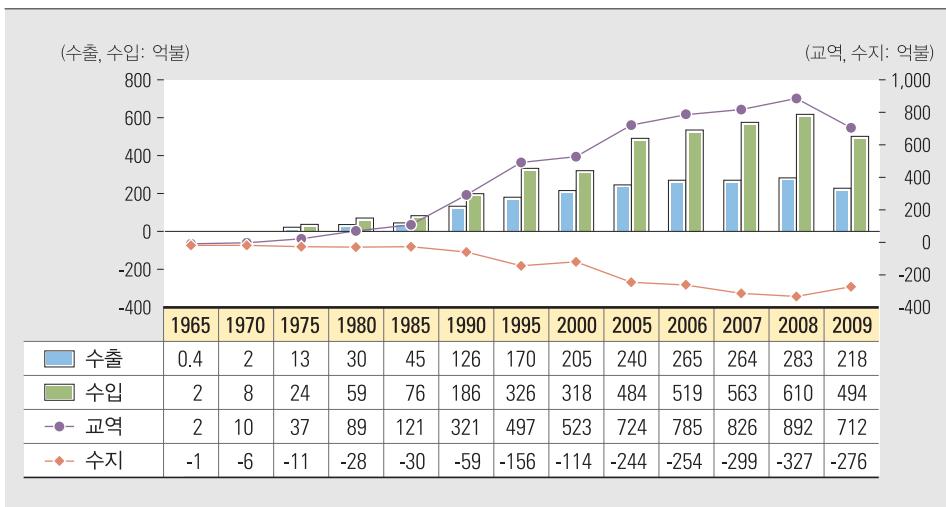
이와 더불어 한·EU 간 통상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매년 한·EU 공동위를 개최하고 있다. 1996년에 체결된 한·EU 기본협력협정에 따라 양측은 2001년부터 매년 서울과 브뤼셀에서 공동위를 번갈아 개최하여 경제동향, 양자 간 통상현안 및 정책,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7차 한·EU 공동위가 2009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통상현안이 원만히 해결된 사례로 EU는 다기능 휴대폰 품목 분류 문제를 들 수 있다. EU 일부 회원국들이 다기능 휴대폰을 TV(관세율 14%), GPS(관세율 3.7%) 등으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은 휴대폰(무관세)으로 분류해줄 것을 제7

차 한·EU 공동위(2.9),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발송(2.18) 등 계기에 요청하였으며, EU 집행위는 우리 정부 등의 우려를 수렴하여, 2009.7.1~3 EU 관세규정위원회를 개최, 다기능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분류하는 규정 및 해설서를 승인하였다.

### 3) 한·일 통상외교

한·일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는 수교 아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어 왔으며, 투자, 사회보장, 세관 분야 등 각 종 분야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1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892억불로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2009년도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9년 712억불을 기록, 전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다.

■■■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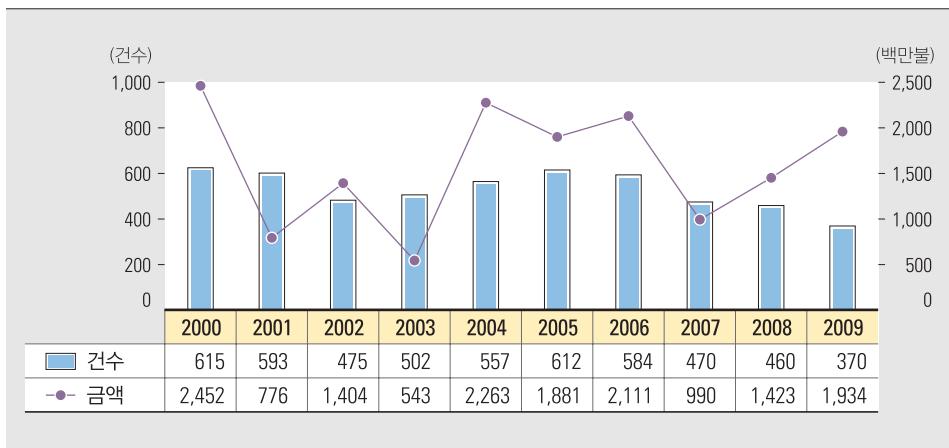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일 양국 간 교역에 있어 우리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무역적자 규모가 200억불을 넘어선 이래, 2008년에는 327억 불로 적자가 더욱 심화되었다. 2009년에는 276억불로 적자가 줄어들었으나, 이는 금융위

기 영향으로 2009년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전체 교역규모 대비 무역적자의 비율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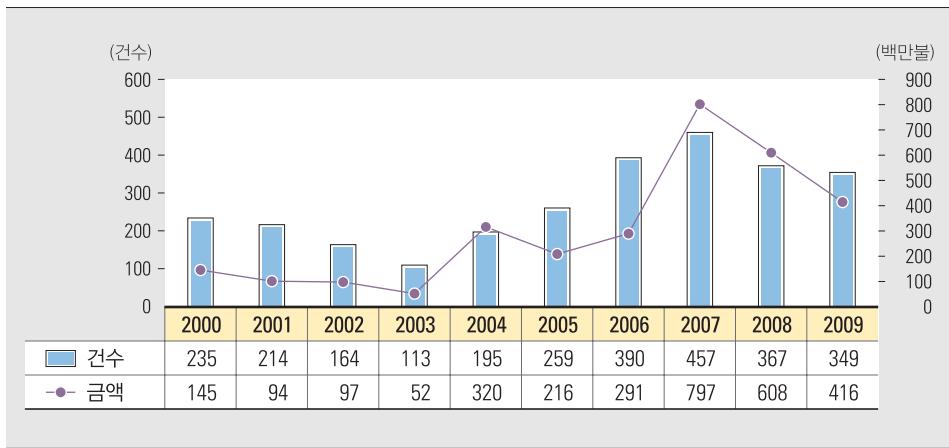
정부는 대일 무역역조 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도록 국내 관련 정책과 인프라를 조성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주원인인 한·일 간 부품·소재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본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시 표명한 부품소재 전용 공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 대기업 및 중소 기업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 최근 10년간 일본의 대한국 투자 동향



\*출처: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 ■■■■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일본 투자 동향



\*출처: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일본의 대한 투자는 1999~2000년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24.5억불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의 대한 투자는 2007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고, 2009년도 19.3억불을 기록하였다. 1962년 이래 2009년까지 누계 기준 일본은 제2위의 대한 투자국이다.

한국의 대일투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나 전반적으로 규모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한국의 대일투자가 4.16억불에 그쳐 2007년 7.97억불을 기록한 이래 감소 추세에 있다.

양국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일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 회담을 비롯하여 외교장관회담, 통상장관회담 등 장관급 협의채널과 고위경제협의회,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 등 양자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28일 방일 시 아소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부품소재 산업협력,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고, 한·일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0월 9일 방한한 하토야마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셔틀외교 강화, 한·일 그린파트너십 구체화,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 G20·기후변화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합의하였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2009년 10월 도쿄에서 제8차 회의가 개최되어 2010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는 2009년 4월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를 촉진시키고 비관세조치 문제 등 무역투자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에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 4) 한·미 통상외교

한·미 간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 한·미 교역규모는 847억불에 달하였으나, 2009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한·미 교역규모가 667억불로 감소하였다. 현재 미국은 중국·EU·일본에 이어 우리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는 미국의 제7위 교역상대국이다.

##### 2009년 한·미 교역현황

	수출	수입
	376.5억불	290.4억불
주요 품목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등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부품 등

\*출처: 한국무역협회

2009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377억불로 전체 수출의 10.4%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등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대미 수입액은 약 290억불로 전체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장비, 항공기 및 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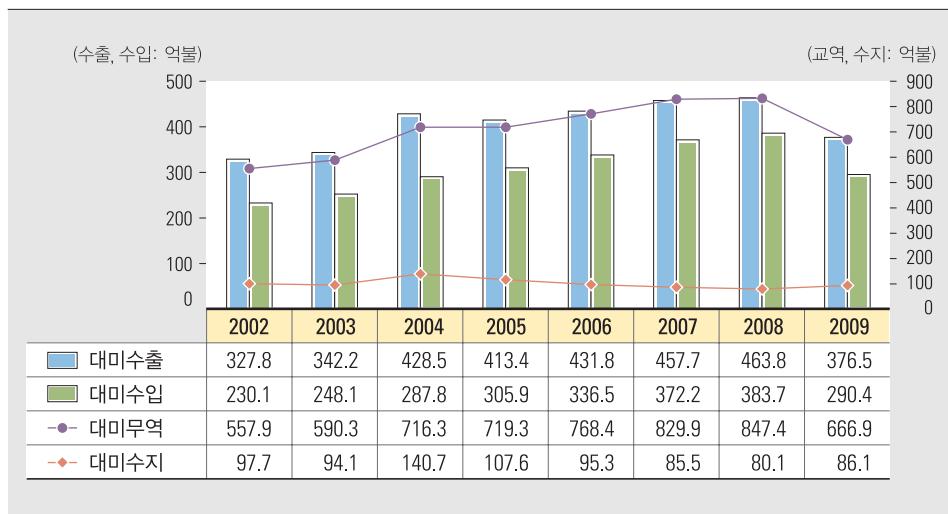
##### 2009년 한·미 투자현황

	대미투자	대한투자
2009 투자액	39.2억불	14.9억불
투자 누계액	357억불(1968~2009)	418억불(1962~2009)

\*출처: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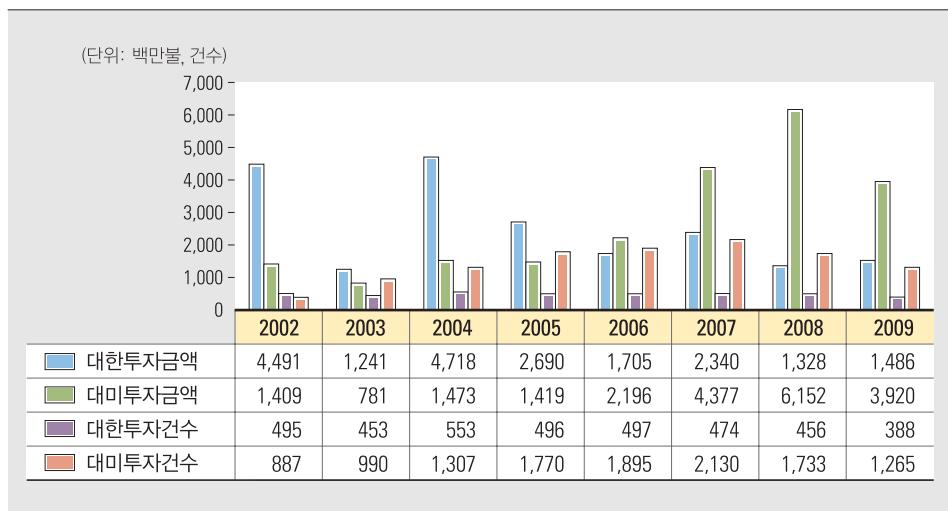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해외투자대상국(누계기준)으로서 1968~2009간 대미 투자 누계액은 357억불로 우리나라 총 해외 투자액(2,080억불)의 17.2%를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외국인투자국(EU제외시)으로서 1962~2009년간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418억불에 달한다.

### 한·미 교역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 한·미 투자 동향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한·미 교역 및 투자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절대액 기준으로 전반적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중국과의 급속한 교역 확대 및 미국 내 한국 상품 점유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세<sup>1)</sup>를 보이고 있다.

1) 전체수출(수입) 중 대미수출(수입) 비중은 2000년 21.8%(17.3%)였으나 지속 하락하여 2009년도에는 10.4%(9.0%)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한·미간 경제의존도의 상대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sup>2)</sup>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중요한 교역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우리의 입지와 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우리의 경제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앞당긴다는 목표하에 미국과의 FTA 협상을 2006년 2월 3일 개시하여, 2007년 6월 30일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미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동차,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GMO), 지재권 등 여타 한·미 간의 주요 통상 현안들도 원만히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통상문제 협의를 위해 2006년 2월에 한·미 FTA 협상 출범 시 중단한 분기별 통상현안점검 회의를 비정기 협의인 ‘통상협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7년부터 개최해왔으며, 2009년에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USTR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3차례(3.11~12, 7.27~28, 12.17~18)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통상현안이 원만히 해결된 사례로 2009년 미국의 Special 301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건을 들 수 있다. Special 301조 보고서는 1988년 미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거,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주요 교역국에 대해 평가하는 연례보고서(4월 말 발표)로,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등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Special 301조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1989년 아래 매년 우선감시대상국(9회) 또는 감시대상국(11회)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09년도 보고서에서는 감시대상국에서 처음으로 제외되었다.

## 2.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양자적 대응

WTO 다자 간 무역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외국 정부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미국 GDP 14조 3,340억불

한 수입규제조치는 조사개시만으로 수출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우리 제품에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이 부과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관련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업계 자체적으로 외국의 규제당국과 직접 접촉·대응하여 우리 측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는 2000년 9월 지역통상국 산하에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였다. 수입규제대책반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외국 규제당국과의 양자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 및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측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규제 현안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를 담은 정부입장서를 관계국에 제출해 왔으며, 필요 시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업계 및 정부입장을 전달하며,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총 121건이며 이 중 반덤핑 조치가 95건, 상계관세 조치가 4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22건으로, 수입규제 조치에서 반덤핑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상계관세는 정부가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이지만 반덤핑의 경우, 개별기업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했느냐의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반덤핑조사에서도 기업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 조사 당국에 분명히 함으로써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수입규제조치와 같은 보호무역조치는 국제 경제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다. 2008년 말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 세계적 실물경기 위축이 2009년 들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입규제조치를 더 많이 활용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수입관세 인상, 반덤핑 조사 다수 개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국제 금융 위기의 여파로 각국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적인 수입 규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외에 다양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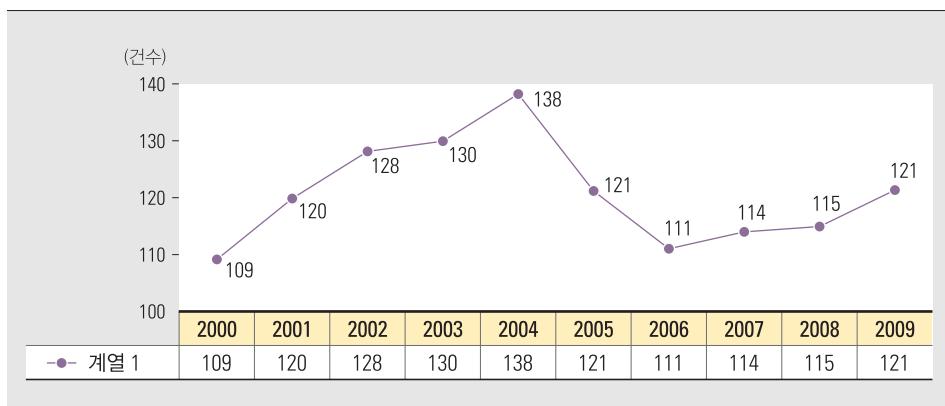
행함으로써 수입 규제 대응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수입규제대책반’은 통상적인 수입 규제조치뿐만 아니라 품목 분류를 통한 관세 인상, 수입 상품에 대한 인증제도 강화, 수입 물량 제한 등 총 32개의 조치에 대해 상대국 정부에 대한 구두 교섭, 정부 입장서 전달, 양국 정부 간 협의 시 의제화, 수입규제대책반의 파견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중 21건에서 조사 중단, 관세율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인해 관세 부과가 실현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부과되고 있던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 부담 총액은 약 5억불에 달한다. 이 금액을 수출을 통해서 회득하려면 2008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5.9%를 적용할 때 약 86억불을 수출해야 한다.

#### 수입규제대책반의 주요활동

- 수입규제 조사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 수입규제 조사개시 이전, 조사중, 예비판정, 확정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하여 관련 업계 및 협회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 업계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측 대응논리를 구성
- 수입규제국과 정부 간 양자협의
  - 주요 수입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정부 간 양자협의를 갖고 우리업계 및 정부입장을 전달하고 협조요청
- 서한 및 정부 입장서 전달
  - 주요 수입규제 현안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서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

#### 연도별 수입규제 건수 추이



### ■■■■ 주요국의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단위: 건수, 2009년 말 기준)

국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계
인도	22(1)	0	0	3(1)	25(2)
중국	20(1)	0	0	0	20(1)
미국	11	0	4	0	15
터키	6	0	0	4	10
EU	7(2)	0	0	0	7(2)
러시아	1(1)	0	0	5(3)	6(4)
파키스탄	6(3)	0	0	0	6(3)

\*괄호 안의 수치는 현재 조사 중인 건수

### ■■■■ 국가별·분야별 수입규제 현황

(단위: 건수, 2009년 말 기준)

국가	화학	철강	섬유	전기전자	기타(기계/제지 등)	합계
인도	18(2)	1	3	2	1	25(2)
중국	16(1)	1	1	1	1	20(1)
미국	2	11	1	0	1	15
터키	1	0	5	2	2	10
EU	2	2(1)	2(1)	1	0	7(2)
러시아	1	3(2)	0	0	2(2)	6(4)
파키스탄	3(2)	0	2	0	1(1)	6(3)

### ■■■■ 2009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성과

	제품 (규제국)	연간수출량 (천USD)	변경전 관세율	변경후 관세율	포기된 관세액 (천USD)	비 고
1	부식방지 탄소강판 (미국)	32,500 (해당 업체 수출량)	2~3%	0.51%	650	당초 연례 재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체를 대상에 포함, 제외될 경우 적용 예상되었던 2~3% 관세를 0.51%로 인하
2	피스톤 부품(미국)	8,628	0% (예비판정)	0%	-	피스톤 부품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시도를 봉쇄
3	DRAM (일본)	109,499	9.1%	0%	9,964	상계 관세 부과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을 성공적으로 봉쇄, 기존 관세 철폐
4	PSF (EU)	160,241	5.7%	3.9%	2,884	기존 반덤핑 관세율을 EU 법원의 판정을 통해 3.9%로 인하
5	스테인레스 냉연강 (EU)	143,000	11.3% (예비판정)	0%	21,422	제소자의 제소 철회 형식으로 반덤핑 조사 중단 달성

	제품 (규제국)	연간수출량 (천USD)	변경전 관세율	변경후 관세율	포기된 관세액 (천USD)	비 고
6	다기능 휴대폰 (EU)	42,260 (DMB폰) 4,300,000 (GPS폰)	14% (DMB폰), 3.7% (GPS폰)	0%	165,016	종전 TV(관세 14%) 및 내비게이션(관세 3.7%)으로 분류하던 다기능 휴대폰을 무선전화(관세 0%)로 변경
7	토너 카트리지 (네덜란드)	300,000	6%	0%	18,000	종전 사진용의 화학조제품(관세 6%)으로 분류하던 토너 카트리지를 프린터 부품(관세 0%)으로 변경
8	신문용지 (중국)	1,466	55.9%	0%	821	성공적인 일몰 재심 대응을 통해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달성
9	열연제품 (인도)	425,633	25% (예비판정)	0%	106,408	산업 무피해 입증을 통한 반덤핑 부과 시도 봉쇄
10						조사요건 미충족 주장을 통한 세이프가드 관세 미부과 도출
11	탄산칼륨 (인도)	10,988	6.83% (조사 결과서)	1.5%	586	사실상 확정된 조사 결과서 상의 오류를 지적, 대폭적인 관세 인하 도출
12	코팅종이/ 판지(인도)	12,248	20%	0%	2,450	산업 무피해 입증을 통해 긴급수입 제한조치 부과 시도를 봉쇄
13	도금강판 (인도)	20,000	-	-	-	강제인증제도 조치 시행을 1년간 연기시킴
14	스테인레스 강선 (캐나다)	284	181%	0%	514	성공적인 일몰 재심 대응을 통해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달성
15	평판 압연제품 (러시아)	40,422	0%~23.6%	0%	4,770	반덤핑 조사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통해 관세 미부과 결정 유도
16	LCD-TV Panel (러시아)	100	11.5%	0%	9 (9개월분)	기존 관세 면제 조치 9개월 연장
17	중국산 냉장고 (우크라이나)	109,000	약 100%	0%	109,000	재심 개시 시도를 봉쇄, 기존 무관세 유지에 성공
18	냉장고 및 자동차 (우크라이나)	53,261 (냉장고) 915,042 (자동차)	13%	0%	62,940 (6개월분)	우크라이나의 수입과징금 조치 6개월 연장 움직임을 사전에 저지

	제품 (규제국)	연간수출량 (천USD)	변경전 관세율	변경후 관세율	포기된 관세액 (천USD)	비 고
19	열연강판 (태국)	56,577 (해당 업체 수출량)	6.31%	0%	3,570	재심을 통해 기존 관세율을 영세화
20	L형강 (필리핀)	1,198	-	-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대상 범위 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제외
21	편지물 (브라질)	25,447	-	-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개시 자체 를 사전 봉쇄
22	LCD TV (아르헨티나)	23,070	-	-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개시 자체 를 사전 봉쇄

### 3.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참여

#### 1) DDA 협상 경과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의에서 공식 출범한 이래, 추가적인 시장 개방 및 보조금 감축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그간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에 대해 미국, EU와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선·개도국 간 입장 대립으로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겨 9년째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DDA 협상은 발족 이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실패, 2004년 8월 기본골격(일명 July Framework) 합의,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개최, 2006년 7월 협상 일시 중단, 2007년 1월 다보스 소규모 각료회의 계기 협상 재개, 2008년 7월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의 잠정 타협안 도출에 이은 12월 각료회의 개최 무산 등 부침이 있었다.

2009년 중 DDA 협상은 미국, 인도 등 주요국 정치일정과 농업협상 의장 교체, 2008년 12월 각료회의 개최 무산으로 인한 여파 등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7월 라퀼라 G-8 확대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APEC 통상장관회의, 9월 뉴델리 통상장관회의,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 제7차 WTO 각료회의 등에서 DDA 협상 타결 시한을 2010년으로 재설정하여 타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결집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협상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10~12월간 매월 고위관리회의(SOM)를 개최하여 잔여 쟁점을 논의하고, 아울러 각 협상 그룹별 회의를 고위관리회의(SOM) 전후에 개최하여 회의 결과를 후속 고위관리회의(SOM)에 보고토록 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 2) 우리의 활동 성과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서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통상이익 확보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양자·다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09년 중 협상 내용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의지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요 각료급, 정상급 계기를 활용, 2008년 잠정타협안에 기초한 DDA 협상 조속 타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결과, 4월 G20 정상 선언문, 6월 OECD 각료 선언문에 이어 7월 G8 정상 선언문, APEC 각료 선언문, 9월 G20 정상 선언문, 11월 APEC 정상 선언문 등에 우리 입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



| WTO 제7차 정례 각료회의(11.30~12.2, 제네바)

또 우리나라는 30여개 주요국이 초청된 9월초 인도 뉴델리 DDA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협상 본격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4년 만에 개최된 제7차 WTO 정례각료회의에서는 2010년 협상 타결 목표를 WTO 차원에서 재확인하고 금년 1/4분기에 DDA 협상점검(stock-taking)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데 기여하였다. 동 각료회의에는 153개 WTO 회원국, 56개 옵서버 국가, NGO 및 국제기구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김종훈 본부장은 전체회의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DDA 협상의 2010년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DDA 협상에서 각국의 민감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결과가 도출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우리는 각 분야별 협상에서 공조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우리의 입장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농업협상에서는 수입국 그룹 및 개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과 서비스 협상에서는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규범 협상에서는 무역자유화를 훼손하는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개정을 주장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공조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더하여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해집단과의 협의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

### 3)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1) 농업

2008년 12월 각료회의 개최 무산 후, 미국 신정부 출범, 인도 총선 등 주요국의 국내 상황으로 인해 2009년 상반기 농업협상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Crawford Falconer 농업 의장은 2009년 2, 3월에 걸쳐 의장對 G10, G33 등 각 그룹 간 순차적인 협의(carousel meeting)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4월 22일 선출된 신임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의장도 주요국 및 각 협상 그룹과 연쇄 협의를 개최하였으

나, 협상 진행 방향에 대한 미국/캐나다 및 개도국들간 이견<sup>3)</sup>이 노정되어 협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하반기에는 9월 개최된 고위급회의에서 연말까지의 협상 계획이 합의됨에 따라, 의장 주도하의 다자협상이 본격화되었다. 동 협상에서는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sup>4)</sup> 합의 도출을 위한 잔여 쟁점 논의와 함께 자유화세부원칙 합의 이후 진행될 국별 양허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 및 양식을 위한 기술적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비록 자유화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양허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양식 등 일부 기술적 이슈에서 진전을 보인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농업 민감성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가 포함된 기존 협상안 안정화를 위해 공조그룹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 협상에 적극 참여해왔다. 향후 협상에서도 기존 합의사항을 기초로 한 협상 진전 원칙을 토대로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2009년 1월 중순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비농산물시장접근 회의에서는 2008년 12월 회람된 의장 4차 수정안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바세샤(Luzius Wasescha) 협상 그룹 의장은, 2008년 12월 각료회의 개최 무산의 요인 중 하나였던 분야별 자유화 관련 논의는 분야별 자유화 제안국 주도하에 참여국 확대를 위한 양자 및 복수국 간 협의를 의장의 개입 없이 진행도록 하였고, 자유화 세부원칙 타결 이후에 본격 진행될 비관세장벽 수평적 및 수직적 제안서별 회의를 의장 주재로 진행하였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은 산업 분야별로 전 세계 교역량의 9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무세화에 참여해야 발효하기 때문에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주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협의를 진행하여 참여를 독려하였으

3) 미국, 캐나다 등은 세부원칙 타결에 앞서 품목별 양자 협의 선행 등 협상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modalities skipping, outcome testing)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개도국들은 디자프로세스 위주의 협상방식 고수 주장

4)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이란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감축공식, 보조금감축공식 등을 포함하는 양허표 작성 원칙으로, 세부원칙이 합의되면 각국은 이에 따라 시장개방계획서(양허표)를 작성하게 된다.

나, 주요 개도국들은 자발적 참여 원칙을 주장하며 참여 불가 입장을 견지하여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산업 분야별 이해를 감안하여 전기·전자 분야에서 공동체안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EU, 대만, 멕시코, 중국 등 전기·전자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참여국 확대 노력(outreach)에도 참여 중이다.

비관세장벽 협상은 3월, 5월, 9월, 11월, 12월 5차례에 걸쳐 13개 제안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의장은 신속해결 메커니즘과 섬유의류 라벨링 제안서는 협정문안 협상이 가능할 정도로 논의가 성숙되었다고 판단, 2010년부터 문안에 기초한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업계의 이익과 합치하는 수출허가 투명성 제안서에 2009년 3월 공동체안국으로 참여한 이래, 참여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타 주요 분야에서의 문안 협상에 대비하여 수정제안서, 질의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비농산물 분야는 농업분야보다 품목 수가 많고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개방을 통해 산업구조 개선 및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세적인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협상 진전을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그룹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3) 서비스

서비스 협상은 크게 서비스 시장개방, 국내규제, 규범 등의 3분야로 대별된다.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은 각 회원국이 2005년 제출한 수정양허안을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양자 간·복수국 간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총 8회의 양자협상이 개최되었다. 또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양자 간 협상방식 외에 총 21개 분야에서의 양허 협상그룹을 구성, 복수국 간 협상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해운, 통신, 금융 등 10개 분야에서는 양허요청국으로, 법률, 시청각, 항공운송 등 9개 분야에서는 양허요청 대상국으로 참여하여 왔다.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 NAMA 모델리티 타결이 실패한 이후 DDA 서비스 시장접근 협상도 잠정 중단되었다가 2009년 11월 클러스터를 계기로 다시 재개되었다.

국내규제 관련 협상은 각국이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서 허가, 자격요건과 절

차, 기술규제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자적 규율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에는 회람된 의장 텍스트 2차 수정안을 토대로 작업반 및 프렌즈 회의를 12회 개최하여 회원국들 간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규범 관련 협상은 2009년 총 4회가 개최되어 서비스 보조금, 정부조달, 긴급세 이프가드(ESM) 등을 논의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선도 산업이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신, 금융, 유통, 건설, 해운의 5대 인프라서비스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각국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4) 여타 협상분야: 규범, 지적재산권, 무역원활화, 환경

##### i ) 규범

규범 협상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반덤핑 프렌즈 그룹<sup>5)</sup>과 수산보조금 공조국 그룹<sup>6)</sup>을 형성하여 반덤핑 조치의 남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축소와 균형 있는 수산보조금 규율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9년 중 갈메스(Guillermo Valles-Galmes) 규범협상의장은 2008년 12월 회람된 의장 제1차 수정안 및 로드맵을 기초로 7차례에 걸친 실무 협상을 통해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켰다. 그 결과, 반덤핑·상계관세의 절차 사항에 관련한 기술적인 개정 작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며, 1차 의장 수정안에 대한 논의는 2010년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의장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완료했으나 금지보조금의 범위, 개도국 특별대우 범위, 어업관리제도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이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보조금이 과잉어획을 초래한다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당 부분 수산보조금의 경우 그러한 효과 입증 시에만 금지토록 하고, 인프라 지원 등 일반 정부 서비스와 복지 성격의 소규모 어업 지원은 금지예외로 포함시키는 내용

5) 반덤핑 프렌즈 그룹은 우리나라, 일본, 칠레, 홍콩, 브라질,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코스타리카, 멕시코, 태국, 이스라엘로 구성되는 DDA 규범협상 반덤핑 분야 논의의 핵심 공조 그룹이다.

6) 한국, 일본, 대만, EU, 캐나다 등은 수산보조금 관련 공조국 그룹을 형성하여 제안서 제출, 공동 입장 정립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의 제안서를 2009년 11월 제출하는 등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반덤핑 협정 개정에 있어서 제로 임 금지, 자동 일몰 등 규율 강화, 수산보조금 협정문 작업에 있어서 과도한 수산보조금 금지 방지 등 우리의 핵심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 ii) 지적재산권

WTO TRIPS<sup>7)</sup> 협상은 3차례 정례이사회와 6차례 특별회의를 통해 기설정의제인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다자등록처 설치뿐 아니라, GI 특별보호 확대 및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간 관계 설정 등 2가지 이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EC, 스위스, 인도 등은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GI 다자등록처의 수립과 함께 GI 보호 대상을 포도주, 종류주가 아닌 모든 상품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및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출처공개를 특허요건으로 규정하기 위해 TRIPS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 호주, 일본 등은 다자등록처는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GI 데이터베이스 구축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포도주·종류주 외 상품으로 GI 특별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으며, TRIPS와 CBD는 별개 이슈로서 특허 출원 시 출처공개(disclosure of source and country of origin) 의무화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WTO 사무총장은 GI 특별보호 확대 및 TRIPS와 CBD 관계 이슈에 대해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4차례 대사급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TRIPS상 비위반·상황 제소<sup>8)</sup> 적용 유예의 경우, 2009년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정례 각료회의에서 차기 각료회의까지 유예 연장이 선언되어, 2011년 말로 예정된 제8차 각료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sup>7)</sup> TRIPS 협정은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로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의미한다.

<sup>8)</sup> 비위반·상황제소는 1947년 GATT에서 도입되고 WTO에서 확립된 제도로서,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 체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 참고자료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

WTO TRIPS 협상과는 별도로 2006년 일본과 미국이 증가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수국 간 조약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ACTA 협상은 민사·형사, 국경조치 등 지적재산권 집행(enforcement) 분야에서 TRIPS-plus 수준의 국제 기준(international framework)과 국제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27개 회원국 포함),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르, 모로코 등 11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는 미국 행정부 수립 등으로 공식 협상을 개최하지 못하다가, 7월 제5차 협상(모로코), 11월 제6차 협상(서울) 등 2차례 협상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은 참여국간 입장 대립과 일부 국가의 국내 사정으로 고착되어 있던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논란이 되어온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집행’ 분야 초안이 처음 회람·논의되었고, 그간 회의와 달리 참여국 간 입장 조율과 협상문안 협의에 초점을 맞춰 형사 집행에서 상당한 논의 진전을 이룬 결과, 통합협정문 초안이 완성되었다. 참여국들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 iii)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 협상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상의 통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범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과 함께 콜로라도 그룹<sup>9)</sup>을 형성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한 해 동안 5회에 걸친 무역원활화 협상에 참석하면서 위험관리 부분에서 관심회원국들과 그동안 논의를 반영한 통합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여타 제안서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등 협상진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상의 또 다른 핵심 이슈는 대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문제로 공통된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9) 콜로라도 그룹이란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결성되었다. 우리나라,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칠레, 홍콩, 대만,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모로코 등 17개국으로 구성된다.

#### iv) 무역과 환경

환경협상은 환경 상품/서비스 자유화, WTO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정(MEA :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중 특정무역의무(STO: Specific Trade Obligation)와의 관계, WTO와 MEA 간 정보교환 및 옵저버 자격 부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환경협상은 총 3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특히 최근 주요 관심사항은 환경상품의 범위 설정문제인데, 협상의장은 2009년 9월 고위급회의(SOM: Senior Official Meeting)에서 2009년 11월까지 각국의 관심 환경상품을 제시하고, 2010년 2월 동 상품들을 수렴한 통합목록을 확립하자는 새로운 작업일정을 제시하며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환경프랜즈 그룹(우리나라 포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만이 관심 상품목록을 제출하여 의미 있는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4. 경제 각 분야 협력외교 기반 구축

최근 에너지안보와 기후온난화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처수단으로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통상부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자협력 증진과 이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1)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및 개정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현재 총 23개국(발효 20개국, 미발효 3개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에는 요르단 및 UAE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원자력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12월 우리의 UAE 원전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일본 총리의 방한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2009년 7월 제 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가 발전용 원자로 도입을 계기로 체결한 1973년에 체결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2014년 3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 미국 측과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협정 체결 이후 발전되어온 한·미 간 원자력관계를 반영하여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09년 11월중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 기술협의를 개시하여 협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 2) 주요국과의 항공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자유화 등 항공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9년 6월 한·캐나다 항공자유화 협정에 합의한 바, 역대 최고수준의 항공자유화를 실현하였으며, EU와의 항공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또 2009년 6월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시 한·ASEAN 항공협정 체결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ASEAN 지역과의 항공자유화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2009년 1월 한·중 항공회담을 통하여 김포-베이징(수도공항)간 셔틀 노선 개설에 합의하여 현재 구체적인 운항관련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 3) 투자보장·이중과세·사회보장 등 경제관련 협정 체결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부국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중 투르크메니스탄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체코와도 투자보장협정 체결협상을 진행하였다. 향후 에너지자원 부국 및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증가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보장 체결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사회보장세 이중부담으로 인한 재정부담 경감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주요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며, 2009년 중 덴마크, 인도와 사회보장협정 문안합의, 노르웨이, 스페인 등과 협정 체결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소득 발생 시 이중과세 부담 방지를 위하여 체결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해 2009년 중 에스토니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고 리비아와 가서명하였다.

## 제6절

# 통상투자진흥 외교

### 1.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외교통상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시장 적응과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의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전 재외공관에 설치된 ‘통상·투자진흥종합지원반’의 운영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동 지원반은 재외공관과 업계 간 협조채널을 구축하여 주재국에 수출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2008년부터 6개 공관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서비스 제공 공관 수를 11개로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20개 공관 이상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공관

2008년(6개)	주중국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 주멕시코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2009년(11개)	주중국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또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민관 합동 통상투자사절단을 세계 주요시장, 유망시장 및 틈새시장에 파견하고 있다. 동 사절

단은 외교통상부가 파견 대상지역 및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구성하고 있다. 2010년에는 통상투자사절단의 파견 회수를 더욱 확대하고, 파견지역도 기존의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sup>1)</sup>

한편, 200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협력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개척이 어려운 농식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농식품 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4월 농림부와도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우리 재외공관에서 농식품의 대주재국 수출 확대 및 한식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sup>2)</sup>

또 우리 기업들이 UN 조달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UN 조달시장설명회’를 민관합동으로 5차례 개최하였고, 2010년에도 2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 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통해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2008년도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감소한 1조 6,000억불을 기록하였다. 2009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투자 위축으로 대부분 국가들의 FDI 유치 실적은 전년 대비 급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1) 1999~2009.12월 170여 개국 파견

2) 2009년의 경우 전 세계 37개 우리 재외공관에서 총 41회의 농식품 수출 및 한식 세계화를 위한 홍보행사를 개최

2004년 급격히 증가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는 117.1억불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여 2004년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2009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114.8억불로 2년 연속 110억 불대를 기록하여, 여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 ||||| 우리나라 FDI 유치 현황

(단위: 백만불)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고액	6,471	12,796	11,566	11,247	10,515	11,711	11,484
도착액	5,138	9,289	9,611	9,123	7,832	8,363	6,622

\*출처: 자식경제부

향후 우리나라의 FDI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노력과 아울러, 반(反)외자 정서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Invest Korea 등을 중심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투자유치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국내 영업환경에 대한 해외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 ||||| 재외공관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실적(건수)

연도	투자설명회 및 IR 개최 지원	투자유치단 및 투자방한단 지원	잠재투자가 발굴/ 기투자가 접촉	외국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 지원
2009	42	108	90	18

2009년에는 전 세계 투자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전년도 수준의 FDI 실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UNCTAD에 따르면 2010년 세계 FDI는 2009년 추정치(1.2조불) 대비 16.7% 증가한 1.4조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FTA 및 투자 협정 체결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선된 투자환경을 홍보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 경제통상 정보제공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이 보고한 각국의 정부조달 및 입찰정보 등을 국내 유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E-mailing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sup>3)</sup>,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최근시장정보란 및 해외입찰정보란을 각각 개설하여 재외공관에서 보고한 각종 경제통상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재외공관 경제 담당관들이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주 입찰 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 2001년 12월부터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사이버기업서비스란을 개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주재국 시장 관련 문의에 대해 1:1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3,166건의 답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우선, 1998년부터 주요 교역 대상국의 통상환경을 분석·정리한 「외국의 통상환경」을 매년 발간하여 국내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sup>4)</sup> 또한, 외교통상부는 2007년 이후 매년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통상마찰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 사례를 수록한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2009년도 사례집에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우리 기업들이 주재국내 기업 경영활동 중에 겪은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와 통관, 투자, 노무 등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71개 공관의 지원 사례 172건이 소개되어 있다.

<sup>3)</su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지방상공회의소 등 45개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총 1,181건의 정보메일을 제공하였다.

<sup>4)</sup> 2009년판 외국의 통상환경은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금융 등 15개 분야별로 각국의 통상장벽 관련 정보를 분석, 정리한 종론적인 성격의 「분야별 통상환경」(1권)과 아시아·대양주, 미주, 아중동, 구주 등 4개 지역의 국가(총 95개국)별로 경제현황, 우리나라와의 무역·투자 관계, 각종 통상장벽 현황 등을 분석, 정리한 각론적 성격의 「지역별 통상환경」(4권) 등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지원

### 1) 여수박람회 개최 준비 현황

2007년 11월 27일 제14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총회에서 여수 유치가 확정된 이후, 체계적인 여수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2008년 3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이 공포·시행되었으며, 제1대 장승우 위원장에 이어 강동석 위원장이 2009년 6월 제2대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차장)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수조직위는 조직위 정관 등 중요 사안 의결을 위해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총회, 집행위원회에 각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수조직위 사무처에 배영한 대외협력본부장 등 4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 2) 여수박람회 참가 유치 교섭

2008년 5월 여수조직위가 여수박람회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여수조직위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08년 12월 2일 제144차 BIE총회에서 여수 박람회가 BIE의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수조직위는 BIE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여수박람회 참가 유치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여수조직위와 협조하여 2009년부터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참가유치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여수박람회 참가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에 2010년 5월까지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총 50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하였다. 금년에는 총 70개 국가 참가유치를 목표로 2010 상하이박람회(5.1~10.31), 11월 G20 정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참가유치 교섭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 참고자료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요

- 명칭: 2012 여수세계박람회(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 기간: 2012. 5.12~8.12(3개월간)
- 장소: 전남 여수시 여수신항 일대(174만m<sup>2</sup>)  
• 박람회장 25만m<sup>2</sup>, 엑스포타운 54만m<sup>2</sup>, 엑스포역 16만m<sup>2</sup>, 환승주차장 44만m<sup>2</sup>, 공원 및 기타 35만m<sup>2</sup> 등
- 주제: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자원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활동  
(The Living Ocean and Coast: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
- 참가자수: 100개 국가, 5개 국제기구, 10개 기업, 16개 지자체
- 관람객수: 약 800만 명(국내 745만 명, 외국 55만 명)
- 기대효과: 생산유발 12.3조원, 부가가치 5.7조원, 고용유발 79,000명



